

여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놓고 신경전 팽팽

민주, 28일 본회의서 처리
尹에 “거부시 후폭풍” 압박

국힘 “정쟁용 특검” 반대
이준석 “특검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검법

처리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적 여론도 높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안망으로 폭망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게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특검법에 반대한다면 김건희 방탄 정당, 50억 클럽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쌍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당내에선 야권 주도로 쌍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차치하고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다.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것까지

도 다시 뒤져서 수사하게 되는 구조”라며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하나,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영합하려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아무런 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법이 통과되고 거부권을 쓰면 재의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 재의결하는 데 동참하지 않아서 부결되면 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 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진욱 “호남정치 복원” 광주 동남갑 출마 선언

정진욱(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부특보가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정부특보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현 검사 독재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움으로써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정부특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냄으로써 광주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역차별로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광주에



대한 의도적 홀대”라며 “노골적인 지역차별에 저항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광주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걸맞은 미래 인재 육성과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호남 정치 복원은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가 그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가지는 것이다”며 “독재와 일치 단결해 싸운 것이 호남 정치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다시 광주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민주 “R&D 예산 원상복구” 국회 천막농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

안도걸, 민주당 입당 ‘광주 동남을’ 출마 선언

안도걸(사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재정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집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영진 당대표 정부조정실장, 황희 의원 등 당내 수뇌부가 함께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입당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다.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붓



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둬으로써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정권 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소중한 밑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 출신인 안 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 담당 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통이다. 기재부 차관·예산실장은 호남에서 16년만에 나왔다. 안 전 차관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다. 동남을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 지역구다.

김선욱 기자

박노원, 민주 정치신인들과 공동 출마 선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담양함평장성영광 출마예정자인 박노원(사진) 민주당 부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신인 18명과 함께 ‘민주당 내 혁신’과 ‘민생 개혁’을 가치로 공동 출마를 선언했다.

11일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신인모임(이하 퇴진과 혁신) 소속 민주당 정치 신인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민주당을 반드시 바꾸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박노원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졌다”며 “신인들이 이 자리에서 공



동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요구인 당의 기득권을 혁파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대통령·국무위원·검사를 불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할 것이다”며 “우리 헌법은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악한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하고 21세기판 ‘서울의 봄’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민주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

‘랩(LAB) 2030’ 간담회
총선 청년 1호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1호 정책으로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월 20만대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ی겠다는 청년 정책이다.

저렴한 비용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과 지방에 제공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으나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 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향후 법안 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홍정민 LAB2030 단장은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든 대학이 15곳이나 되고, 기숙사가 없는 대학도 6곳”이라며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부지 마련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구도심의 폐교, 지자체 공공시설, 국공립대 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호 정책위 의장은 “비교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연합 기숙사’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년 패스’ 정책을 발표하고 교통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청년 패스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정부·여당에 제안한 정책으로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 ‘초등생·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촉구

정의당 전남도당이 11일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릴적 대중교통 이용 경험 많을 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초등학생·청소년 100원 버스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현재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초등학생·청소년 교통복지를 살펴보면, 신안군이 무상교통, 고흥군 50원버스,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이 100원 버스 제도를 도입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제 대중교통은 도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황지 기자